

농지개혁 → 새마을 운동 → 통일벼 → 탈 농촌 → 유기농

# 농산물 개방 압력 '새로운 시련'

- 홍 보 부 -

**은** 해는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권업모범장'이 수원에 설치되고, 농업 과학화가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농업 인구 감소'는 근대화 농업 10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실제로 전체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10년대 85%에서 지난해 7%로 뚝 떨어졌다. 우리 농업의 근대화 100년을 시대별 키워드로 공부하고, 해결 과제를 짚어본다.

## 키워드로 본 한국 농업 100년

▶**양곡 공출제**=일제는 40년부터 전시 총동원이라는 명분 아래 농가에서 쌀과 잡곡 등 40여 종이 넘는 농산물을 강제로 사들였다. 43년에는 쌀 전체 생산량의 68%를 강제 매수하기도 했다.

▶**농지 개혁**=제헌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50년 3월 바뀐 농지개

혁법이 공포됐다. 이 법의 핵심은 한 농가가 일정 면적 이상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해 지주들이 독점한 농지를 농민에게 싼값에 분배한 것이다. 그 결과 광복 당시 35%였던 자작농 비율이 90%를 넘어섰고 농업 생산력도 높아졌다.

▶**잉여 농산물**=한국전쟁 뒤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은 거의 파괴돼 55년 미국과 잉여농산물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70년까지 밀과 면화 등 미국에서 남는 농산물을 들여왔다. 잉여농산물 도입은 기아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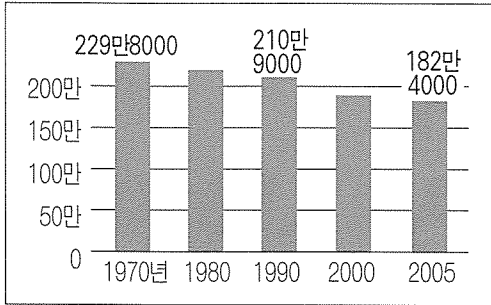
▶**새마을운동**=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운 농촌 형편에서 70년대부터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를 구호로 새마을운동이 펼쳐졌다. 정부는 71년 농촌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 길 넓히기와 초가지붕 개량 등 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생산 협동 사업과 농한기 부업 등 소득 증대 사업도 독려했다. 새마을운동으로 새로 닦은 마을길만 3만9583km로 경부고속도로의 90배에 이른다.

▶**통일벼**=70년대 초 석유 파동과 기상 이변으로 곡물 생산이 크게 줄자 정부는 식량 증산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 결과 71년 탄생한 것이 통일벼(IR-667)다. 일반 벼 생산량은 10a당(1000㎡) 330kg을 넘지 못했지만 통일벼는 500kg을 넘었다. 통일벼 보급으로 77년 전체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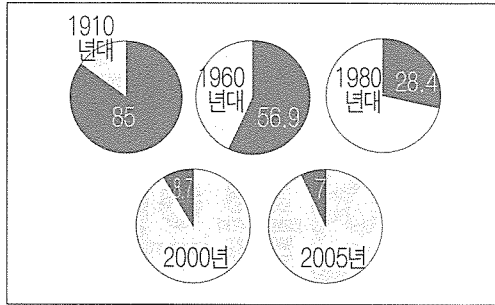


## 그래프로 보는 농업 근대화 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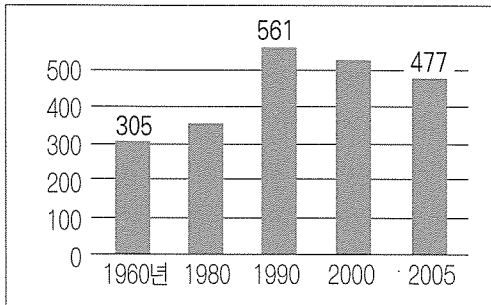
▶경지면적(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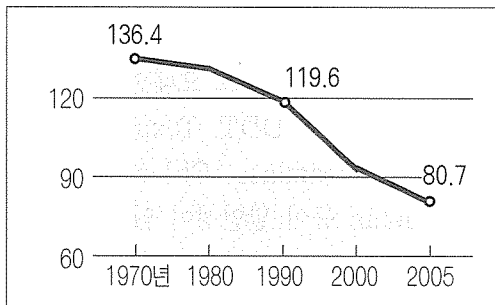
▶농가 인구 구성비(단위: %)



▶연도별 쌀 생산량(단위: 만t)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단위: kg)



(자료: 농림부)

생산량이 4000만 섬을 넘어서 쌀 자급이라는 '녹색 혁명'을 이뤄냈다.

▶**이농 현상**=공업화와 저곡가 정책 때문에 이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70년대부터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농촌은 일손이 모자라고 평균 연령도 높아지게 됐다.

▶**우루과이라운드**=94년 117개국 이 서명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타결됐다. 결과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이었다. 쌀은 10년 동안 유예됐지만, 가격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농업의 위기였다.

▶**친환경·유기농 제품**=경제 수준이 향상되며 '웰빙 식탁'이 강조되자 국내 농업은 친환경 농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친환경 농산물 비중은 전체 농산물 가운데

4%(시장 규모 7000억 원)에 이르고, 해마다 비중이 커지고 있다.

### 앞으로의 과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농산물로, 쌀이 그 중심에 있다. 2004년 말 쌀 협상이 마무리된 뒤 올해 수입되는 쌀은 4만6500t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등으로 수입 농산물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판될 수입 쌀 비중은 전체 쌀 소비량의 1%로 미미하다. 하지만 현재 kg당 1000원 안팎에 낙찰돼 우리 쌀의 절반 값으로 팔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키우고 개방의 파고를 넘을 준비를 해야 한다(2006. 10. 9, 중앙일보).